

북한 분과회의 결과 보고서

협동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 덕룡

I. 개요

1. 일 시 : 2004년 5월 29일(토) 15:00 - 18:00
2. 장 소 : 12층 회의실
3. 참석자 :

- 윤덕룡 박사 (KIEP, 간사)
- 김계동 교수 (국가정보대학원)
- 권만학 교수 (경희대)
- 김병기 교수 (아주대)
- 홍용표 교수 (한양대)
- 이우영 교수 (경남대)
- 최진욱 박사 (통일연구원)
- 김연수 박사 (통일정책연구소)
- 유성욱 박사 (국가정보대학원)

4. 의제

- 남북한 정치통합과 경제통합

발제자: 최진욱 박사 (통일연구원)

주제: 남북한 정치통합

II. 최진욱 박사 발표논문 요약(상세한 내용은 별첨 논문 참조)

□ 정치통합의 원칙:

- 통일한국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사회주의의 민주적 중앙집권제나 일당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등이 통일한국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가 되어야 함.
-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등이 통일한국의 권력구조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서구민주주의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고려될 수 밖에 없음.

□ 권력구조의 이론적 검토 및 현행 권력구조의 개선방안

- 통일을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다수결모델(majoritarian model)보다는 소수의 거부권이 인정되는 합의모델(consensus model)이 바람직함.
- 즉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반대정파간에 정책과 지지기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권력이동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한 권력의 독점이 허용되는 다수결모델이 가능함. 그러나 통일한국과 같이 이질적인 두체제가 결합하였을 경우 사회균열구조가 다차원적(이념적, 지역적, 계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소외집단의 출현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정파간의 이념 및 정책의 차이가 크고 정권의 이양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수결 모델보다는 합의모델이 적합함.
- 즉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창출함에 있어서 화합성과 안정성은 모두 다 중요하고 국민통합이라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비추어서 화합성이 더욱 중

요하나 통일 이후 초기에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여 체제위협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통합체제에서 정부형태 및 의회제도

- 통일한국의 의회제도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원제도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양원제가 바람직함.
- 정부형태의 경우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안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의회제도의 경우는 양원제가 단원제에 비해서 정부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통일한국의 의회제도로써 양원제를 택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 없이 화합성에 기여할 수 있음.

III. 토론

- 정치통합이라는 주제를 지나치게 이론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유리되는 감이 있으므로 양자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치통합의 문제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거의 전 분야에 대한 개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정치통합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전개되는 상황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통합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정치통합을 몇가지 분야로 나누기로 하고 그 기준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장들을 개별논문화 하도록 합의함.

-끝-